

이덕일의 '역사의 창'



광복 73년, 분단 73년

1945년 8월 15일 중국 서안에서 일제의 패망 소식을 들은 백범 김구는 “그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 차라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일이었다”라고 한탄했다. 대한민국이 참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한 채 종전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김구의 불길한 예감처럼 광복 후 정국을 외세구 주도한 결과 남북한은 분단의 비극을 맞았다.

선종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수회 출신이었던 이병도·신석호 등만 남아서 역사학계를 완전히 장악했다.

북한은 1947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내에 조선력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지 '역사재문제' (歷史叢叢叢)를 발간했다. '임격정'의 저자인 백초 홍명희의 아들 홍기문이 1949년 '역사재문제'에 기고한 '조선의 고고학에 대한 일제 어용학설의 검토'에는 일제가 만든 식민사학에 대한 북한 역사학계의 인식이 잘 담겨 있다. 홍기문은 일제가 조선을 점령한 후 "조선 역사에 대하여 이상한 관심을 보였다"면서 일제가 만든 역사학을 정리했다. "첫째 (서기) 전 1세기에 4세기까지 약 5백 년 동안 오늘날의 평양을 중심 삼아서 한인(漢人)의 식민지인 낙랑군이 설치되었다는 것이요. 둘째 신라·백제와 함께 남조선을 분거하고 있던 가라(加羅)가 본래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요."

윗글처럼 홍기문은 제국주의 역사학의 중심사라 '낙랑군=평양설'이고 둘째 가아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가야=임나설'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1958년경부터는 리지린을 북경대학교원에 유학 보내 고사변학파(古史辨學派)의 중심 인물인 고힐강(高赫綱)의 지도로 고조선사를 연구하게 했다. 리지린은 1961년 8-9월에 열린 '고조선에 관한 과학 토론회'에 참석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를 계기로 '낙랑군=평양설'은 자취를 감추고 '낙랑군=요동설'이 대세가 되었다. 리지린이 1962년 박사학위 논문인 '고조선연구'를 출간하면서 '낙랑군=평양설'은 완전히 폐기되고 '낙랑군=요동설'이 자리를 잡았다. 같은 해 김석형은 임나는 한반도의 가아가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었던 한반도 계통의 소국이란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을 발표해서 일본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반면 조선사편수회 출신들이 장악한 남한 역사학계는 조선총독부에서 날조한 '낙랑군=평양설'과 '임나=가야설'을 아직도 '정설' (定說)이라고 떠받들고 있다. 북한에서는 56년 전인 1962년에 해체시킨 식민사학의 두 이론이 여전히 '정설' 이란다. 광복 73년이 지난 지금까

지 식민사학을 '정설'이라고 우기는 남한 학자들과 이런 학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남한 사회를 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식민사학이야말로 남한 사회의 가장 오랜 적폐인데, 촛불로 탄생했다는 새 정권 출범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식민사학 적폐 청산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새 정권 들어서 거꾸로 식민사학이 제 세상 만난 듯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의 말을 '역사를 잊은 정권에 미래는 없다'로 바꾸어도 정확하게 들어맞음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소국이란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을 발표해서 일본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반면 조선사편수회 출신들이 장악한 남한 역사학계는 조선총독부에서 날조한 '낙랑군=평양설'과 '임나=가야설'을 아직도 '정설' (定說)이라고 떠받들고 있다. 북한에서는 56년 전인 1962년에 해체시킨 식민사학의 두 이론이 여전히 '정설' 이란다. 광복 73년이 지난 지금까

(한기람역사문화연구소장)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석은하
광주기독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

재생 능력 유발하는 프롤로 치료

으며, 시술자에 의한 차이도 커서 그동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궁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임상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고 한층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프롤로 치료는 기존 주사나 약물에 비해 장기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과 생체의 면역 기능 및 자연 치유력인 재생 능력을 이용해 보다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를 예상하는 현대 사회에 적절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롤로 치료는 인대 및 힘줄의 손상 부위와 골절합부, 관절 부위에 재생 자극 물질 주사해 성장 인자를 활성화시키고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다. 강장된 면역 반응은 척추와 관절에서 이완된 인대와 힘줄,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힘으로써 점차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를 방지하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근골격계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 원인의 상당 부분이 인대와 힘줄, 관절의 약화와 관련이 있고, 이에 따른 골격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것인데, 프롤로 치료가 이

러한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것이다. 사용 되는 약물은 생체에 해가 되지 않는 고통도의 포도당 용액이 주로 쓰이고 있다.

프롤로 치료를 해볼 만한 증상으로는 뒷목의 통증을 동반하는 만성 두통이나 원인 불명의 등·가슴 부위 통증을 들 수 있다. 또한 목과 팔, 허리나 엉덩이, 다리의 통증과 불편함을 동반하는 척추 질환에서도 도움이 되며 어깨 인대(회전근개)의 부분적인 손상에도 적용해볼만한 하다. 팔꿈치 통증, 손목과 발목의 통증, 손목 터널 증후군,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다. 무릎의 인대 손상 및 연골판 손상,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원인 불명의 무릎 통증 등 무릎 분야는 물론 족저 근막염(발바닥의 통증), 아킬레스건 손상, 수술 후 지수되 는 통증, 스포츠 손상이나 교통사고 후 계속되는 통증에도 치료해 볼 만하다.

가장 주목할 점은 프롤로 치료가 통증의 일시적인 호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통증을 유발하는 골격계의 근본적인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술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초기에 적절한 치

료가 이루어지면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대상 질환이나 증증도에 따라 시술자의 임상 경험(시술 방법) 등에 따라 치료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예민한 치료법이다. 프롤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이용해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신경 치료 및 근육 치료 등 동시에 시행해 치료의 결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모든 질환이 그러하듯 근골격계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며, 생활 습관의 관리도 필수이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평소 가벼운 스트레칭과 적당한 운동으로 관절과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무리한 반복 동작은 가급적 피하고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수차례 다양한 치료를 했음에도 효과가 없을 때는 프롤로 치료를 추천한다. 특히 수술을 결심한 환자라면 사전에 프롤로 치료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고



김용호
전남도의원(강진도)

폭염 대책 강화로 농가 피해 최소화해야

야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농업인도 예외는 아니다. 보건 당국과 지자체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온열 질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백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고령의 농업인들이 논밭에 나섰다가 쓰러지는 위험한 상황도 상당수이다.

전남지역은 닭·오리·돼지 등 폐사된 가축만 수십만 마리에 이른다. 이로 인한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 비는 내리지 않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저수율도 크게 떨어져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농가가 초비상이다. 장기화된 폭염과의 전쟁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전남도는 가축 폭염 피해 예방 대책비로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폭염 장기화로 인한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지금도 한발 늦었다는 긴장감으로 폭염을 비상 사태로 보고 발 빠르게 움직여

야 할 것이다. 농작물의 경우 폭염에 따른 토양 수분 증발과 지온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소와 과수는 관수 실시로 토양 수분을 유지하고 생육 부진 때는 염분 시비를 실시해야 한다. 폐사 축 치리기 설치, 고온 스트레스 보급, 농업현장 기술지원반 파견 등 대응도 신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폭염 속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더운 낮 시간대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져야 한다.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을 입고, 시원한 물과 염분을 섭취해 탈수병을 예방해야 한다. 고령 농업인과 만성 질환자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

비상 체제로 농업 재해 대책 기구를 가동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농작물과 가축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고령 농가와 여성 농업인을 비롯한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관계 공무원들도 농촌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 농가의 애로

사항을 직접 듣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물론 AI 사태 시 살처분 등의 과로로 인해 순직한 공무원이 발생한 사례에서 보듯, 과도한 업무로 인해 불상사를 당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예측 불허의 기후 변화로 폭염은 매년 되풀이되고 더 가혹해질 가능성이 높다. 가축 재해 보험 가입비의 도비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폭염과 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남도는 물론 각 시군구들이 일상생활에 유익할 수 있도록 별도의 행정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 별도의 기구가 여의치 않을 경우는 기존 기구를 활용하되 미리 폭염·축산을 전담하도록 업무 분장을 규정해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준비된 재난은 재난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철저한 예방과 초동 대처, 기민한 대응이 이뤄지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일이 없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를 이반 폭염 사태에서 다시금 되새기자.

社說

삼성 전장 산업 광주 유치 총력전 나서라

삼성이 자동차 전장(電場: 전기·전자) 부품 산업 등에 180조 원대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전장 산업 육성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킨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해 자칫 다른 시도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향후 3년간 국내 130조 원을 포함한 모두 18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AI)과 5G, 바이오, 전장 부품 등 4대 신성장 산업에만 25조 원이 투입된다. 삼성의 발표 직후 지역 정치권은 투자 유치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전북은 새만금에 자율 주행 전기 상용차 기지 조성, 대구는 스마트 공장 5G 유치, 경북은 자동차 부품 단지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의 투자 분야 가운데 전장 부품은 자동차 전기·전자 장치를 통칭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산업

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삼성전자 광주 공장 가전 라인 일부가 해외로 이전하자 그 대안으로 전장 부품 유치를 추진해 빛그린국가산단 내 클러스터 조성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3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산업자원통신부가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장 산업 광주 유치를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특위까지 꾸렸던 더불어민주당도 선거 이후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광주의 경우 전장 산업 육성이 이미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포함된 만큼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면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런 만큼 1900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 정치권은 전장 산업을 국가 계획으로 조기에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상생 발전 이번에는 꼭 결실을

민선 7기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가 공식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은 오는 20일 전남도청에서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상생 과제 실천 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2016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광주 민·군 공항 전남 이전 문제 등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 시도는 민선 6기 초기인 2014년 10월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해 30개 협력 과제를 추진한 바 있다. 그동안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제2남도고속 건립, 광주전남 캘러리 운영 등이 합의됐고 에너지 밸리 조성, 혁신도시 활성화 등 19개 과제는 현재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민선 6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낙연 전 지사의 총리 임명, 6·13 지방선거 등으로 별다른 진전

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상생발전위원회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는 자못 크다. 그도 그럴 것이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이 하나같이 지역의 중요 현안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양 단체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교착 상태에 빠진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와 한전공대 설립은 대표적인 난제다. 특히 한전공대 건립 문제는 상생발전위원회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 부지와 규모, 개교 시기에 이견이 있고 지역 간 유지 경쟁도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현안은 일자리 창출과 균형 발전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파급력이 막강하다. 따라서 이번에는 꼭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양 시도는 필요할 경우 '통 큰 양보'를 통해 대승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

無等鼓

김대중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소위 민주정부가 집권하면 어김없이 '지방자치'가 중요한 이슈가 됐다. 민중과 자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의 모든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아니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중앙집권을 토대로 수백 년 이상,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가 도입된 바 있다.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얻고자 지역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속의 해 결론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이후 광주도시철도 2호선, 부산 BRT(급행간선 버스시스템) 도입 등 지자체 사무에 . 이를 적용하지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론도 있다. 공론이 대표성,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선거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론(公論)

단체장이 다시 주민에게 판단을 미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공론이

가부만을 결정하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는 결국 지자체와 주민이 책임져야 하는 모순도 발생한다.

주민자치의 의미를 살려 지역의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단체장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공론이 찬반 논쟁에 매몰되기보다는 광주의 미래를 중시해 진행하고, 주민, 지자체가 그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연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